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배포시부터 보도가능</h2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	
책 임 자	권대영 금융정책과장(2156-9710)	담 당 자	고영호 서기관 (2156-9711)
	최성일 감독총괄국장(3145-8300)		김영근 사무관 (2156-9712)
배 포 일	2015.6.15.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5매

## 제 목 :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!

### -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개최

☐ 금융위원회(위원장: 임종룡)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기 위한 「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」를 개최

○ 금융권 협회, 연구원, 금감원 등과 함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작업 방법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음

■ 일시/장소: '15.6.15.(월) 07:30 ~ 09:00,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

#### ■ 주요 참석자

- 금융기관(7인) :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
- 연구원(5인) : KDI, 금융·자본시장·보험연구원, 보험개발원
- 금융당국(14인) : 금융위원장, 금융감독원장, 금융위원회 사무처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, 금융당국 실무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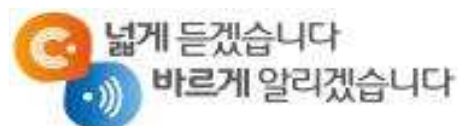
☐ 앞으로 금융규제개혁 작업반(반장: 금융위 사무처장)과 은행·지주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하여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

※ 별 첨 :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## ① 금융위원장

□ 진정한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**금융개혁의 절반**이자, 핵심 과제인 **금융규제개혁**을 본격적으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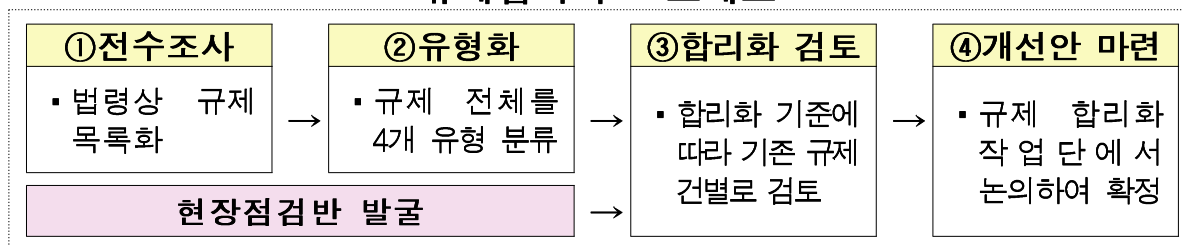
- 금융개혁은 크게 **Project 형태\***로 추진하는 분야와 이번에 추진하는 **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**으로 구분됨

\* 검사·제재개선, 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개혁, 기술금융개선, 핀테크 활성화 등

□ 이번 규제개혁은 **규제 전체를 전수조사** 및 **4가지로 유형화**하고 유형마다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존치여부를 판단

- 금융규제는 법령, 감독규정, 시행세칙 등 **명시적 규제**뿐만 아니라, 행정지도, 모범규준, 가이드라인 등 소위 **‘그림자 규제’**도 전수조사
- 금융권 협회와 연구원은 **전담팀을 구성**하여 전수조사한 규제에 대해 업계의견, 국제기준 등 합리화 기준에 따라 검토
- 업계·연구기관에서 **개선해야 할 규제**를 「검토·제기」하면, 금융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수용하고,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「상세히 설명·소명하거나 대안」을 제시

## &lt; 규제합리화 프로세스 &gt;



□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음

- 검토 완료된 과제는 즉시 확정, 여타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하고 시행령·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은 연내 제·개정 목표로 **후속 조치** 추진
- 법률개정 사항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제출

-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추진하겠음
  - 금융규제개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·모니터링 해 나갈 것임
  - 금융권도 내부통제제도 강화 등 자율책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 필요

---

## ② 금융감독원장

---

- 금융개혁이 금융회사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, 국민들이 실질적인 금융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
  - 금번 금융규제 개혁은 과거와 달리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**Bottom-up** 방식과, 규제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**Top-down** 방식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
  - 금융규제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
-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‘유사한 규제가 중복적인지,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금융회사의 부담만 늘리는지’ 등을 촘촘히 따져서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
  -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세세하게 직접 규제하기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표 등을 통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,
  -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역량과 책임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한편,
  - 금융규제 개혁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 또한 보다 철저히 해나갈 것임

### ③ 주요 참석자 발언

#### □ 은행연합회

- ① 그 동안 금융권이 과도한 규제 탓을 하며 현실에 안주  
→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당국의 변화에 화답  
\* 내부혁신과 변화 없이는 후진성의 책임은 금융권에 있음
- ② 혼연일체의 리더십이 금융위/금감원의 중간간부에도 정착되어야  
규제개혁의 성과 지속 → 당국 직원 평가제도 필요
- ③ 네거티브 시스템, 전업주의 완화 등 장기과제도 방향성 제시

#### □ 금융투자협회

- ①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책임을 강화 → 금융사 자율성 확대
- ② 세세한 행위 규제 및 숫자에 매몰된 감독 지양
- ③ 글로벌 위기 이후 훼손된 자본시장법 제정 본연의 정신[포괄주의, 원칙중심 감독] 반드시 복원

□ 여신금융협회 : 금융사고 후 남아 있는 일부 과도한 모범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비 필요

□ 신탁중앙회 : 업권별 규제 차등화, 동일 업무/동일 규제 강조

□ 저축은행중앙회 :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업계 자율적 결정사항에 당국과 사전 협의(예 : 모범기준 개정시 사전협의) 필요  
→ 업계의 자율적 결정사항을 명확화하고 사후보고로 대체

□ KDI : 비용·편익 분석 절차 준수 등 규제개혁의 지속가능성 중요

□ 금융연구원 : 금융권의 자율책임 강화가 규제개혁의 핵심  
[CEO의 책임 구체적 부여 → 이사회가 평가·감독하는 환경 조성]

#### □ 자본연구원

- ① 금융사 혁신 DNA 부족 ← 금융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혁신기업
- ②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육성 필요
- ③ 금융사고 후 방향성 없는 규제 강화에 대한 반성

□ 보험연구원/보험개발원/생·손보 협회 : 위험 평가 및 Pricing에 있어 그림자 규제를 축소하고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 필요

**1단계 : 금융규제 전수조사 / 유형화**

- ① 금융규제 전수조사(법령, 규정, 세칙, 행정지도, 모범규준, 협회 자율규제 등)
- ② 금융규제를 4개 유형(시장질서, 소비자보호, 건전성, 영업행위)으로 유형화 → 협회·연구원 TF 전달

금융위·  
금감원**2단계 : 규제 개선방안 마련**

- ① 협회는 업계의견 수렴, 연구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선진사례 등 조사를 중심으로 규제를 점검
- ② 개별 규제에 대해 규제합리화 기준 7개\* 적용
  - \* 사전규제→사후책임 강화, 글로벌 기준에 부합, 오프라인→온라인, 포지티브→네거티브, 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 맞춰 경쟁촉진,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정비,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
- ③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→ 금융당국 전달

협회·  
연구원 TF**3단계 :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회의 논의·개선안 확정**

- ① 협회·연구원 TF 개선안에 대해 분과위 검토  
→ 이견이 있는 사항은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회의 상정  
※ 금융당국은 불수용과제에 대해 대안제시 또는 합리적 사유 소명
- ②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확정

분과위 검토  
↓  
금융규제개혁  
작업단**4단계 : 신속한 후속조치**

- ① 시행령, 시행규칙, 규정, 기타 그림자 규제 등  
→ 즉시 개정(연내 완료 목표)
- ② 법률 개정 → 하반기 법안 마련(일괄개정 방식)  
→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

금융위·  
금감원